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정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가스 보조금... 유가 급등 우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 물가나 금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제가격을 이유로 유류가격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회계기준질의회신 한 눈에...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열람서비스' 개시

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18일 회계기준과 질의회신을 동시에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회계기준열람서비스'를 공개했다.

회계기준열람서비스에선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등에 흩어져 있던 회계기준과 질의회신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기업이 직면한 회계이슈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한 번에 검색 및 이용 가능하다.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가 선보일 '회계정보 플랫폼'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회계기준원 웹사이트 내에서 회계기준열람서비스 외에도 '신속정규절차질의'를 함께 운영한다.

기업은 열람서비스를 통해 회계문제에 대해 자체 해결할 영역이 넓어지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 자체 작성 역량 확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어려운 회계문제가 있어도 회계기준원 회계질의를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

외부감사인 역시 필요한 정보를 제정기관을 통해 편리

하게 습득할 수 있고, 투자자는 회계이슈와 관련된 모든 회계정보를 한 번에 모아 파악해 투자의사결정에 도움 받을 수 있다.

회계기준원은 앞으로 회계기준열람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공개되는 질의회신 요약과 연차개선 및 개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 추가적인 가독성 정비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회계기준 본문과 관련 결론도출근거를 연계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중 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심의회 정족수 규정 중 단서 규정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안은 단서규정인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삭제해 법제처의 법안 입안 심사기준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은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및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조사국장과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경상계대학의 교수 1명, 금융회사의 임원 2명, 경제단체의 임원 3명, 학술연구단체의 연구원 2명, 시민단체의 임원 3명 중에서 여성위원 5명 이상, 시민단체 추천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11명을 국세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